

이재명 “‘독도 일본땅’ 얘기하면 박차고 나왔어야 대통령”

민주 원내대책회의... 징병 강제성 희석 등 초등학교서 검정 통과 비판
박홍근 “대일 굴욕외교 대가가 역사 왜곡”...유기홍 “누굴 위한 외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데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 프레임에 부각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차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은 ‘오트라이스-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 동원 부정부조각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보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채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냐”라며 “윤 대통령의 굴욕외교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께서 일본에 모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역사 왜곡을 위해 끊임없이 도발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 왜곡을 용인해주는 태도를 취한다”며 “현 정부의 외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정부-여당이 ‘대일 굴욕외교’를 했다는 주장을 부각하며 보궐선거에서 심판론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군 창녕읍에서 진행된

4·5 보궐선거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지원유세에서 “목숨을 바쳐 3·1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 반면, 국가의 자존심을 갖다 버리고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여도 좋다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독도 얘기를 했는데, 이 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역사에 ‘욕인하더라’고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 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고,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자존심 갖다 버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경남 창원군 창녕읍 송현리 창녕장(5일장)에서 4·5 창녕군수 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野 3당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협의”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최장 1년 9개월 활동’ 자체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물론 정의당·기본소득당과도 연대해 정부-여당을 압박,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특별법안 공동 발의를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법안을 이미 제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법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 생활 보호권, 기억·추모·애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금주 내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

회의와 의 간담회를 통한 법안 보완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특별조사위 활동 기한은 일단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장 1년 9개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법 제정에 앞서 조직도 개편했다.

본부장은 남인순 의원이 계속 맡되, 간사 겸 부분부장은 이성만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유가족지원단장은 이혜식 의원, 제도개선 추진은 박주민 의원, 국민소통단장은 한준호 의원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호화 관사 논란’ 감사원장 권익위 신고

개·보수에 7개월간 1억4천 사용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과다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조끼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이 담겼다.

신고를 제기한 국회 법사위·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에서 호화관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최 원장은 적극적인 해명이나 자체감사에도 나서지 않아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권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같은당 이태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7개월간 1억4000만원이 쓰였으며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간 전체 유지비의 64%”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화분 재료비에 480만원이 쓰였는데 실제 시어진 화분이 몇 개 되지 않고, 화장실 보수 비용(856만원)은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4배 가량 뺏기됐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당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용은 화분 재료비만 아니라 총 345그루를 매입하고 심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화장실 보수에 든 856만원은 화장실 1곳이 아니라 2곳의 방수공사,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교체 등 전면 개·보수 비용의 합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특검” 정의당 안으로 신속처리

민주 ‘쌍특검’ 타협 제안...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 합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은 두 특검 모두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제시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했다.

반면 정의당의 경우 50억 클럽 특검은 ‘비교섭단체’가, 김 여사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각각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연합뉴스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행사 상황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